

10월 넷째 주 (10.15-10.21)

[지역경제] 절박함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거시] 2015년 3분기 중국 GDP성장률 6.9%,
2009년 이후 처음으로 7% 이하 기록

[산업] 위안화 가치 하락, 수출개선에 부정적 영향 미쳐

[조세] 1~8월 국세수입 151.6조원, 관리재정수지 34.2조원 적자 기록

[금융] 금감원, 연말 은행의 여신 리스크 관리 직접 조사키로

[금융] 금통위, 기준금리 현 수준 1.50% 유지키로

□ [지역경제] 절박함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1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함
-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참가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함
-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 가능체계 구축'이라는 4대 핵심 분야를 정하여 대책을 수립함



<그림> 생산가능인구·핵심근로인구 전망추이 (10월18일 연합뉴스 자료일부 인용)

- 2020년 합계출산율을 2014년 기준 1.2명에서 1.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저출산 대책의 중심을 기존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에서 만혼·비혼 추세심화 방지로 전환함
- 구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행복출산패키지’ 시행,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금액 상향, 수요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종합대책 패키지가 제시됨

○ 합의 및 전망

- 기본계획 시안발표 익일의 포털과 언론의 반응들이 냉담하였던 것은, 국가대계가 달린 중대한 사항에서조차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임
- 전세대출 1억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국가가 나선 맞선프로그램 등 현실감 없는 대책들이 나열된 종합선물세트 정책패키지로는 지난 1·2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80조원을 쓰고도 출산율 상승에 실패한 결과를 되풀이 할 조짐이 무척 높아 보임
- 일본 아베정부는 작년 ‘지방창생 담당상’에 이어 지난 10월 17일 ‘1억 총활약 담당상’을 신설하는 개각을 단행하여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 10월 21일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제안한 ‘초등5년·중등5년’으로의 학제개편 추진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는 황당한 발상임
- 국무회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는 이번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어 어떤 효과를 만들지 심히 우려됨

□ [거시] 2015년 3분기 중국 GDP성장률 6.9%, 2009년 이후 처음으로 7% 이하 기록

○ 10.19. 중국 국가통계국(NBS), 2015년 3분기 중국 GDP 통계 발표

○ 주요 내용

- 전년 동기간대비 GDP 성장률은 2015년 3분기까지 6.9%(경상가격: 48조7,774억 위안)로 2009년 1분기의 6.2% 이후 6년 만에 7% 이하를 기록함(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2015년 1분기 7.0%, 2분기 7%, 3분기 6.9%임)

- 중국 국가통계국은

- 1)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 2)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인한 국제 원자재, 증시 및 환율시장 변동성 증가
- 3) 2015년 3분기 중국의 대외수출 감소(-5.7%)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2015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하면서

- 1) 양호한 취업률(9월 실업률 5.2%)
- 2)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지수(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4%)
- 3) 서비스업 비중 증가(3분기까지 3차 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간대비 8.4% 성장한 25조779억 위안으로 전체 GDP의 51.4%에 달함)
- 4)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정책

에 따라 여전히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함

※ 참고: 大衆創業·萬衆創新 정책

- 금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천명함

-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에서는 6월 16일 「대중창업, 만중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国发〔2015〕32号)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6/16/content_9855.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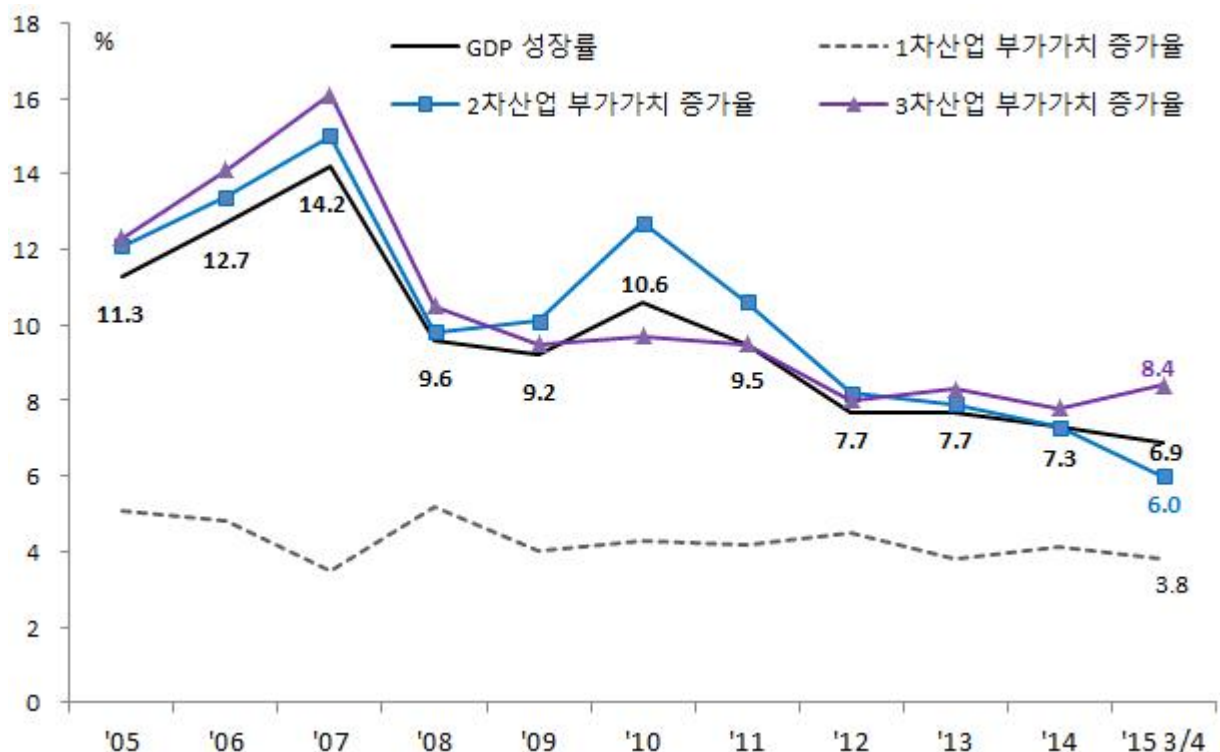
관련: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 대중창업 만중혁신 전략」 참조(다만, 번역 및 정리가 초벌 수준임)

-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9개의 대분류 하에 괄호안의 수에 해당하는 정책들(30개)을 발표하고 각 정책들의 구체적 내용(96개)을 나열함: ①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4개), ② 창업을 위한 자세 및 재정 지원(3개), ③ 창업금융 활성화(3개), ④ 벤처캐피탈 활성화(4개), ⑤ 창업 생태계 구축(4개), ⑥ 기업혁신 기반 마련(3개), ⑦ 창의적 신생기업 발굴(3개), ⑧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와 농촌 간 연계(3개), ⑨ 정책 조정과 협력 강화(3개)

○ 합의 및 전망

-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금번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은 2차 산업부문(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3차 산업부문, 특히 금융기관(Financial Intermediation)의 부가가치(3분기까지 4조2,607억 위안)의 성장(전년 동기간대비 17.0% 성장)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GDP 및 부문별 성장률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14년까지는 연성장률, 2015년3/4분기는 전년동기간대비 성장률임

-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각에서 중국 정부의 발표 자료의 정확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 목표치인 7.0%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1~15일까지 중국인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국경제 관련 설문조사(10월 14일, 「중국인 전문가의 중국 경제 진단과 시사점」) 결과에 따르면,

- 1) 중국의 정책 및 경제구조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 2) 고급 소비재 수출 확대 등 내수 중심 성장 시대의 중국 시장 공략 전략을 강화해야 함
 - 3) 증시불안 등 중국발 금융리스크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지속 강화해야 함
 - 4) 혁신기술 개발 등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對중국 경쟁력 약화에 대응해야 함
 - 5) 최근 가속되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중국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중국이 6%대 중반 내외 성장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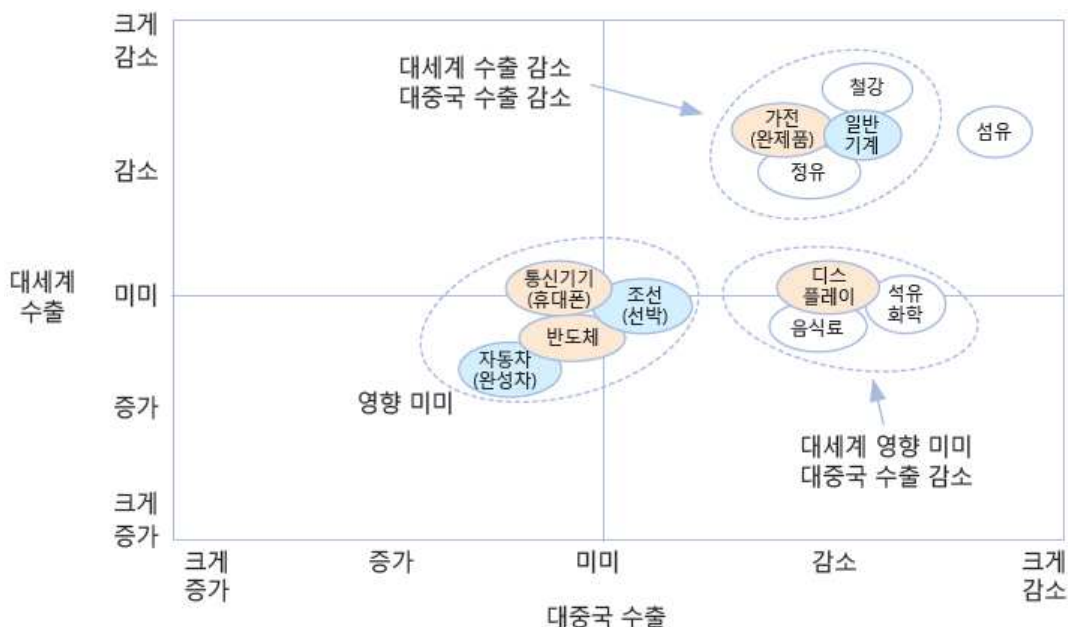
□ [산업] 위안화 가치 하락, 수출개선에 부정적 영향 미쳐

○ 10.15. 산업연구원, 「위안화 절하 시 주력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

○ 주요 내용

- 올해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선진권 경기회복,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수출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에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가전, 휴대폰, 자동차, 섬유 등의 해외생산 확대, 국제유가 하락, 엔화 약세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여기에 위안화 절하 변수가 등장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개선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위안화 절하 지속 시 주력산업의 수출 영향 분석



자료 : 산업연구원(KIET).

- 위안화 절하로 섬유,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완제품) 등은 중국산 가격경쟁력이 제고

되면서 대중국 수출의 감소가 예상되며, 대세계 수출 역시 중국산 섬유제품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되리라 우려됨

- 석유화학산업,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은 세계시장에서 한·중간 경합도가 낮거나 중국 제품의 대세계 수출비중이 낮아 위안화 절하로 인한 수출영향은 미미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국산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중국 수출량 감소가 예상됨
- 반도체, 완성차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적 공급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기술격차로 인해 중국과 비경쟁관계에 있어 수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대폰은 중국 현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중국 수출영향은 미미하고, 선진국 휴대폰시장에서도 한·중 경합도가 낮아 대세계 수출 영향 역시 거의 없을 전망이다
- 조선산업의 경우, 선박은 중국과 제품차별화 등으로 위안화 절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경기가 상승하고, 가격경쟁력 제고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된다면, 국내 주요 부품의 대중국 수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합의 및 전망

- 국내 주력산업은 위안화 및 엔화 약세, 유가변동, 환경규제 등 대외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국내산업의 가격·제품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중국 주력 산업의 설비, 소재, 부품, 디자인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수불가결 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공동의 이해 증진 등의 노력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제고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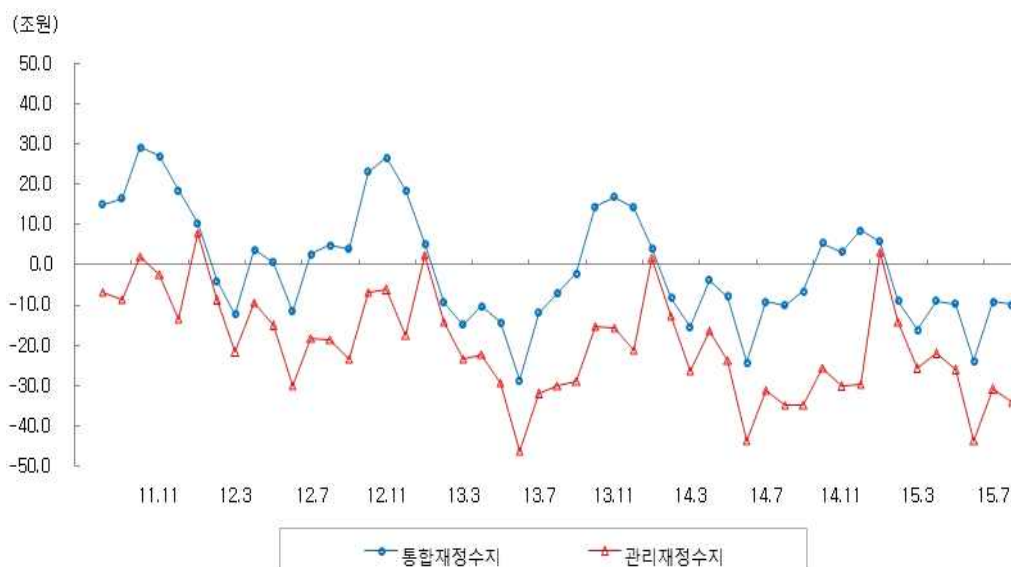
□ [조세] 1~8월 국세수입 151.6조원, 관리재정수지 34.2조원 적자 기록

○ 10.20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간

○ 주요 내용

-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함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 1~8월 누계 총수입은 252.5조원, 총지출은 262.4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2조원 적자이며,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0조원임
- 2015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3조원 중 9월말까지 집행액은 253.2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80.8% 수준

○ 함의 및 전망

- 상반기 메르스 대응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4/4분기 역시 재정집행의 가속화로 관리재정수지(추경기준 연간 △46.5조 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관리재정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는 국가재정에 불안요소이므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수입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금융] 금감원, 연말 은행의 여신 리스크 관리 직접 조사키로

○ 10.19. 매일경제 「“이대로 가면 은행까지 망친다” 칼 빼든 금융당국」 보도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연말 손익 목표를 채우기에 바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충당금 적립에 대해 직접 조사키로 하였음
- 지난 7월 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위기를 대비해 은행들이 미리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한 바 있음.
- 미 의회 역시 지난 7월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 소비자 법”(도드-프랭크 법) 제14조 파산법 조항을 검토하고 납세자에게 부담 지우는 대마불사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반 법률을 수정토록 하는 내용을 논의 한 바 있음.
- 이러한 국제적인 관행에 비춰 금융감독원의 이번 계획은 은행이 여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임.

※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 소비자 법”(도드-프랭크 법)

- 지난 2007-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마련된 법안임.
- 제14조가 미 의회에서 논란이 된 까닭은 제14조에 위기에 빠진 민간금융기관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납세자가 이런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평상시 위기 관리의 일환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직접 자금을 적립해서 위기 시 스스로의 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미 의회에서 토론되었음

○ 함의 및 전망

-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특별한 업무 수행은 아니나, 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임은 분명함. 미국의 사례처럼 향후 우리나라도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

□ [금융] 금통위, 기준금리 현 수준 1.50% 유지키로

○ 10.1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주요 내용

- 지난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외 여건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연방기금목표금리) 동결, 중국 등 신흥시장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함
- 대내 여건은 민간 소비와 투자는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보았고, 고용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실업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으로 관측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방침임.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세, 미 통화신용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의 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함의 및 전망

- 금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나 중국 경제성장이 7.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9일 7월~9월 3분기 성장률을 6.9%로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이마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 된 것도 사실임.
- 국내 경제 여건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다 선제적이며 경기 대응적인 통화신용정책기조가 필요함. 향후 물가안정 뿐 아니라 고용의 극대화에도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자넷 옐런(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24일 메사추세츠 대학 강연에서 밝힌 바대로 연내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며, 더 중요하게 우리 기업과 시장이 잘 대응 할 수 있도록 선명한 태도와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